

#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6
----------	------

제출연월일 : 2019. 9.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하남시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5조)
- 나. 의회 동의 내용 구체화(안 제6조)
- 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 마련(안 제7조)
- 라.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부터 제9조)
- 마. 계약 및 재계약 체결 내용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조, 제12조)
- 바.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조항 신설(안 제14조)
- 사.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20조부터 제21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7월 19일 ~ 8월 8일(20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평가 : 의견없음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기획담당관**

##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무
2.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받

영되어 있는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하남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수탁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수탁협약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서명		혁신기획관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혁신기획관 이명훈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금미경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금미경 (790-5472)